



US-CHINA WATCHING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US-China Policy Institute
亞洲大 中美政策研究所

2022. 02. 10 <제39호>

북핵문제의 위급성과 북미 핵협상 재개 방안 : 2022년 신 정부를 위한 제언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정책 제언

북핵협상 재개를 위한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함

- 북한 내 경제·식량·보건·방역위기의 '삼중고' 지속과 국가발전 전략의 실패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관여정책 의지와 이란핵합의 방식의 '잠정합의'에 대한 관심
- 최근 북한의 핵무장 가속화와 향후 북핵위기 재발시 '핵전쟁위기'로 비화 위험성 대비

북미 '잠정합의'를 위한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미니딜' 패키지를 사전에 준비토록 함

- 미국은 '잠정합의'에서 단기간 내 합의 가능한 핵동결 중심의 비핵화 조치(핵물질 생산 중단,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영변핵시설 폐기 등)를 우선 확보토록 함.
- '잠정합의'를 위한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거래 패키지를 미리 개발하여 북한에 제시한다면, 이는 북한이 북미대화의 조건으로 요구했던 '새로운 섀범'에 해당되어 북미대화를 촉진할 것임.

북미 대치를 타개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 송부를 제안함.

- 현 북미 간 대치국면을 타개하고 북핵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싱가포르 공동성명(2018)의 4개 항목을 재확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제안토록 함.

북핵협상 재개 분위기와 남북 인간안보 공동체를 위해 인도지원을 적극 제공해야 할 것임.

- 북한은 최근 김정은이 직접 주민에게 '고난의 행군'이 재현되고 있는데 대해 사과할 정도로 경제제재·자연 재해·코로나19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바, 북한주민의 인간안보를 개선하고, 북핵협상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북 인도지원을 적극 제공할 것을 제안함.

비핵화를 위해 남북관계 정상화, 북미관계 정상화, 동북아 안보대화의 병행발전을 보장해야 함.

- 핵무장과 핵포기에 대한 이론과 사례연구에 따르면, 안보문제 해결이 비핵화의 선결 조건이므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한반도 냉전체제를 평화체제를 전환해야 할 것임.
- 2022년은 '남북 기본합의서' 발효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해 통일 이전의 과도기에 남북관계를 사실상 2개 국가의 통상적인 국제관계로 규정하는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며, 이때 비핵화도 촉진될 것임.

미국은 '잠정합의'에서 단기간 내 합의 가능한 핵동결 중심의 비핵화 조치(핵물질 생산 중단,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영변핵시설 폐기 등)를 우선 확보토록 함

1. 북핵 동향의 엄중성과 북핵 협상의 시급성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의 핵무장 가속화로 인한 한국의 안보 위협 급증

- 북한은 지난 30여년에 걸친 핵개발 과정에서 보듯이, 대형 정치외교적 사건을 계기로 핵개발과 핵무장을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 그런 북한의 핵무장정책 변화를 촉진하는 변곡점이 된 것으로 평가함.
-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말 수소폭탄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성공하자 성급하게 국가 핵무력 완성(2017.11)과 핵무기 4불 정책(2018.4)을 선언하고,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에 나섰으나, '하노이 노딜' 사태를 변곡점으로 다시 핵무장을 가속화했음.
- 북한은 핵역량 증강을 촉진한 결과,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과 2021년 1월 14일 8차 당 대회 기념 야간 열병식에서 온갖 신형 전략, 전술 핵무기를 과시했으며,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 보고에서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를 선언했음.
- 북핵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현재 약 50개 내외의 핵무기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무기용 핵분열물질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추가로 핵무기 5~7개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물질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2030년까지 100기 이상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함.
- 북한이 현재와 같은 핵과 미사일역량 증강 추세를 지속하면, 2030년까지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일본·서태평양 주둔 미군에 대한 선제적 핵타격력과 핵보복력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됨.

북한의 핵무장 완성 이후 비핵화 협상 거부 가능성

- 북한이 핵무장을 성공함에 따라, 향후 비핵화 협상에 순순히 나설 가능성이 낮고, 설사 북핵협상에 참여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핵협상 전략을 구사하며, 비핵화의 진전에 난관을 조성할 가능성이 커 비상한 대응책이 필요함.
- △비핵화 조치에 동의하더라도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단거리·중거리·장거리·잠수함발사 미사일, 전략핵무기, 전술핵무기 등 총체적 핵전력에서 일부만 포기 제안, △비핵화 협상을 북미 상호 핵무기와 핵위협을 감축하는 '핵군축' 협상으로 전환 요구, △비핵화 대가로 한미가 수용 불가능한 한미연합훈련 완전 중단,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령부 해체 등을 요구, △심지어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비핵화 협상을 전면 거부
- 북한의 핵무기 보유 상태가 향후 20~30년 이상 장기화 되면 국제사회도 점차 북핵을 용인하고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과 같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간주할 가능성도 주의해야 할 것임.

북핵위기 재발과 '핵전쟁위기'로 비화 가능성 증가

- 북한이 향후 미사일 시험발사를 반복하고, 심지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는 배경으로 하기 요인을 들 수 있음.
- 첫째, 2019년 북미대화가 중단된 이후 북한이 계속하여 수십 차례 각종 단거리미사일·대형방사로켓포를 발사하여 일체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결의를 위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사실상 묵인했는바, 북한은 이런 관행의 지속과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 무력화를 목표로 미사일 발사를 지속함.
- 둘째, 북한은 2018년부터 핵실험, 중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했는데, 그동안 연구개발한 신형 핵탄두와 중장거리미사일의 생산과 배치에 앞서 실험을 실시해야 할 국방과학기술적 필요성이 있음.
- 셋째, 북한이 8차 당대회 보고(2021.1)에서 선언했듯이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를 위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고, 전략무기의 실험을 반복하여 "(미국과 한국의 대북) 이중 잣대"를 무력화 시키고 협상불가(non-negotiable) 영역으로 만들려고 함.
- 그런데 북한이 중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의 레드라인을 넘게 되면, 미국이 유엔안보리를 동원하여 추가적인 제재압박 조치를 취하고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북핵위기와 전쟁위기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때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서 '핵전쟁위기'가 발생할 것임.

북한의 핵무기 리스크(nuclear risk) 증가

-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 채고, 그리고 핵시설이 증가하면서, 핵무기의 의도적·계획적 사용에 의한 핵전쟁 가능성 이외에도 오산, 위기관리 실패, 실수로 인한 핵무기 사용, 핵무기고와 핵시설에서 사고, 테러, 도난 등에 각종 '핵 리스크(nuclear risk)'도 증가함.
- 특히 북한의 경우, 대남·대미 군사안보정책에서 핵무기의 핵심적인 역할, 고도의 핵무기 사용 태세 가능성, 핵무기 사용에 대한 지휘통제체제의 과도한 일인 집중 및 견제 부재 가능성, 남북 간, 한미 간 군사위기 시 소통체제 부재, 핵무기 우발사용·사고 대응체제 부실 등을 핵무기 사용과 사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음.
- NPT체제 하 핵보유국들은 '핵 리스크' 요인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도입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격리되고, 대남·대미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 '핵 리스크'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고, 그 대응수준도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함.
- 세계적인 핵안보 연구기관인 '핵위협 구상(Nuclear Threat Initiative: NTI)'이 2020년 7월 발표한 'NTI 핵안보지수(Nuclear Security Index)' 보고서(이하 'NTI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와 무기용 핵물질 보유국 중에서 핵안보 위험성이 가장 큰 국가임.

2. 북핵협상 재개를 위한 대북정책 환경 평가: 기회요인을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관여정책 및 북미대화 추진 의지

- 2021년 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때 과거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복귀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성과물인 싱가포르 공동성명(2018)을 폐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이런 전망을 깨고 2021년 5월 21일 문재인-바이든 정상회담에서 적극적인 대북 관여정책을 선언했음.
-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의 계승을 확인하고, 북한의 거부감이 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CVID)', '북한 비핵화' 용어 대신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용어를 사용하고, 남북 판문점선언과 남북협력을 적극 지지했음.
-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 접근법으로 일괄타결의 빅딜 접근법을 포기하고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제시했는바, 이로써 남북미 삼국이 모처럼 사실상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에 일치했음.
-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북한에게 설명하기 위한 북미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을 이를 무시함에 따라, 미국의 현재의 대치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대화 단절과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큼.
- 북한은 북미대화 단절의 기간 동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난·식량난이 더욱 악화되었고,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증강으로 인해 안보와 핵비확산 국익이 크게 훼손되었는바, 북미 양국 모두 현상타개가 필요한 실정임.

바이든 행정부의 '잠정합의'에 대한 관심을 활용

-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이란핵합의(JCPOA)를 높이 평가하고 그 협상 경험과 접근법을 북핵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때 단계적 접근과 '잠정합의'에 대한 높은 관심은 북핵협상을 위한 소중한 기회요인이 될 것임.
- 예를 들면,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018년 뉴욕타임즈 기고문("To Win a Nobel, Trump Should Look to the Iran Deal(2018.5.2.)", "The Best Model for a Nuclear Deal With North Korea? Iran(2018.6.11.)"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을 노린다면, 잠정합의와 본 합의로 구성된 2단계 접근법을 북핵문제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음.
-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 '잠정합의' 방식을 북한에 적용한다고 공식화한 적은 없지만, 이 접근법은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북핵합의도 용이하게 할 것으로 평가함.

북한의 경제·식량·보건·방역위기 지속과 국가발전 전략의 실패

- 북한은 제재압박으로 인한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핵무장에는 성공했지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경제위기·식량위기·보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국제사회에서 최악의 불량국가로 낙인찍혀 있어, 결국 국가발전 전략이 실패한 셈임.
- 따라서 김정은이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북한을 정상국가로 전환시키려면 제재압박과 외교적 고립의 원인이 된 북핵문제를 어떻게든 일부라도 해소해야 하는 곤경에 처해 있음.
- 김정은이 2021년 초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처한 "극악한 제재봉쇄와 혹심한 재난"을 직접 인정했듯이, 기존 경제제재와 자연재해의 이중고(二重苦)에 더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보건위기와 국경봉쇄의 '삼중고'는 북한의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대외행동을 크게 제약하고 있음.
-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강도 높은 경제제재가 추가되면서 북한의 그해 경제성장률은 -3.5%, 2018년에는 -4.1%를 기록했고,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했던 2020년에는 -4.5%로 10년 내 최악을 기록했음.
- 북한이 2021년 7월 UN에 제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을 위한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에 따르면, 곡물생산량이 2018년에 10년 내 최저 수준인 495만 톤을 기록했고, 2019년에 665만 톤으로 크게 증산되었지만, 2020년에는 수해로 다시 552만 톤 생산에 그쳤음.

3. 북핵정책에서 '핵무기와 전쟁위험 없는 한반도' 비전과 '상호위협감축' 원칙 제안

북핵정책의 비전으로 "핵무기와 전쟁위험이 없는 한반도" 제시

-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기 때문에 작금의 북핵사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와 전쟁위험이 없는 한반도' 비전에 사실상 합의했음.
- 탈냉전기 30년 동안 세계적인 평화 추세와 달리, 우리 국민은 북핵위기와 전쟁위기에 반복적으로 시달렸고, 2017년에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전쟁위기를 경험한데 이어 북한 핵무장 시대를 맞아 '핵전쟁위기'의 가능성도 증가함에 따라, 동 비전이 더욱 중요함.
- 보다 포괄적인 한반도정책의 비전으로는 '비핵·평화·안전의 한반도'를 제시하는데, 이는 비핵과 평화의 전통적인 대북정책 목표에 더해, 코로나19, 기후변화, 대형재난 시대를 맞아 '안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최대 효과를 위해 남북 공동대응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

비핵평화정책 원칙으로 '상호위협감축', '포괄적·상호적·단계적·동시병행 추진' 제안

- 핵정책 전문가들은 핵무장의 핵심 동기로 '안보위협'과 '체제불안'을 제기하고 있는바, 이런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북한 비핵화를 가능케 하기 위해 '상호위협감축' 원칙이 필요함.
- '상호위협감축'은 2018년 3월 김정은 위원장이 방북한 정의용 방북특사에게 언급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발언의 취지에 부합함.
- '상호위협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조치로 문재인 정부가 천명했던 '3-노(북한 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 반대)', 트럼프 행정부가 천명했던 '4-노(정권교체, 체제붕괴, 통일 가속화, 미군의 이북 진출 반대)' 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를 대북정책 원칙으로 정착시키도록 함.
- 북핵협상의 포괄적·상호적·단계적·동시병행 원칙에 따라, 당사국은 일체의 요구와 요구 사항을 모두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하고, 상호주의에 따라 상호 이익과 상호 위협감축을 교환하고, 단계적으로 상호 등가의 조치를 병행하여 교환하도록 함.

4. 북핵동결의 '잠정합의' 를 위한 준비와 사전 조치

북핵 동결과 이를 위한 '잠정합의' 의 필요성에 대해 내부 공감대 확보

- 현재 북한은 마음껏 핵과 미사일역량을 증강시키고 핵보복억제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바, 우선 긴급하게 북미 '잠정합의' 를 타결하여 북핵활동을 중지시키고 "북한의 시간벌기" 를 차단해야 할 것임.
- 그런데 한국과 미국 내부에서 단계적 접근법과 일괄폐기 접근법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협상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잠정합의' 에 대한 내부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할 것임.
-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경우, 미국 내에서 스몰딜과 빅딜의 논쟁의 벌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 비판을 우려하여 북한의 '영변핵시설 폐기' 제안을 거부하고, '노딜' 을 선택하여, 사실상 북핵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음.

'잠정합의' 를 위한 미니딜 패키지 준비와 비핵평화 로드맵 작성

- 미국은 우선 북핵동결을 목표로 잠정합의에서 합의와 실행 가능한 낮은 수준의 비핵화 조치(핵물질 생산 중단,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핵 없는 한반도' 목표 재확인, 핵실험과 중장거리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 일체 도발적 군사행동 중지, 영변핵시설 폐기, 핵무기 4불 원칙 재확인 등)를 우선 확보토록 함.
- 미국의 초기 '상응조치' 로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과 대북 적대시정척 불 추구 약속, 북미 정상 소통, 대규모 한미연합연습 중단, 북미수교 협상 개시, 식량·보건·방역의 인도적 지원 제공, 스냅백 조건부 대북제재 일부 완화(석유 도입 상한선 조정, 민수용 통상 부분 허용 등) 등이 있음.
- 북미 잠정합의를 위한 '미니딜' 패키지를 미리 개발하여 북한에 제시한다면, 이는 북한이 북미대화의 조건으로 요구했던 '새로운 섀범' 에 해당되어,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
- '한반도 비핵평화 로드맵' 을 작성하게 되면, 모든 관련 행위자들에게 북핵협상의 목표가 무엇이며, 어떤 경로를 거치는지 알려주고, 이들의 다양한 비핵화 노력을 정렬시키는 효과가 있음.

북미 대치의 타개와 북미대화를 위해 바이든이 김정은에게 친서 송부

-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북한에게 '무조건 대화' 개최를 제안한 후 "공이 북한의 코트에 있다"며 북한의 대답을 압박하고 있는데, 북한은 2019년부터 미국에게 '새로운 섀범' 과 '적대시정책 폐기' 를 요구했고, 아직 그 회답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미국의 대화 요구를 무시함.
- 현 북미 간 대치국면을 타개하고 북핵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 항목을 재확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제안할 것을 제기함.
- 현재 미국 내 분위기와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보면 '친서' 아이디어에 호의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일인지도체제의 성격과 이란핵협상 사례를 볼 때, 교착상태의 타개와 핵협상의 진전을 위해 정상 간 소통이 필수적임.
- 오바마 대통령을 대북특사로 활용할 것은 제안하는데, 그는 재임 시 냉전기 적대국과 관계 정상화를 자신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실행했으며, 또한 후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핵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위험한 안보현안이라고 조언했다는 점도 감안할 때 특사로서 적임일 것임.

북핵협상 재개 분위기와 남북 인간안보 공동체를 위해 인도지원 적극 제공

- 북한은 최근 김정은이 직접 주민에게 '고난의 행군' 이 재현되고 있는 데 대해 사과할 정도로 경제 제재·자연재해·코로나19의 '삼중고' 에 시달리고 있는바, 북한주민의 인간안보를 개선하고, 북핵협상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북 인도지원을 적극 제공할 것을 제안함.
- 북한은 근래 대외 강경책을 추진하면서 외부의 인도적 지원도 거부했지만 최근 유엔에 지속가능발전목표 국가보고서를 제출(2021.7)하고 자신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공개했는바, 점차 인도적 지원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함.
-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거부감이 높을 것이므로, 북한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기구와 NGO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대북 인도지원의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음.
- 남과 북은 평양공동선언(2018)에서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 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 유의하여, 2022년 들어 국내 코로나19 백신의 여유분이 생기면, 대북 백신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함.
- 북한이 매우 엄격한 경제제재 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도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려면 유엔 안보리이사국과 사전협의를 통해 인도지원 물자에 대한 심사를 간소화하거나, 포괄적 면제를 확보해야 할 것임.

비핵화를 위한 남북기본협정, 북미관계정상화, 동북아 안보대화의 병행발전 선순환 구조 구축

- 핵무장과 핵포기에 대한 이론과 사례연구에 따르면, 안보문제의 해결이 비핵화의 선결 조건이므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한반도 냉전체제를 평화체제를 전환해야 할 것임.
-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관계 정상화, 북미수교, 북일수교를 완성하여 북한과 적대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이 엄청난 외교경제적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핵무장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임.
- 2022년은 '남북 기본합의서' 발효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남북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통일 이전의 과도기 동안에 남북관계를 사실상 2개 국가의 통상적인 국제관계로 규정하는 '남북기본협정' 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며, 이때 남북관계의 안정화는 비핵화를 촉진할 것임.

핵무장과 핵포기에 대한 이론과 사례연구에 따르면, 안보문제의 해결이 비핵화의 선결 조건이므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한반도 냉전체제를 평화체제를 전환해야 할 것임

발행처: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발행인: 김홍규

편집인: 서민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울곡관 527-2호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전화: 031-219-3861

홈페이지: <http://ucpi.ajou.ac.kr>

US-China Watching은 미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여 최신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